

정의로운 사회 구현자, 의사상자 지원 방향

목차

- I. 의사상자의 개념
- II. 의사상자 지원제도 및 이슈
- III. 정책 제언

우리 사회 속 의사상자

- ▶ 의사상자는 義의 실천을 통해 사회정의를 몸소 실현한 이들을 의미
 - 2023년 5월 말 기준 도내 의사상자는 153명으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義를 실천
 -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예우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사제도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제도 개선이 시급함

의사상자 지원제도의 이슈

- ▶ 경기도는 ①용어의 개선, ②홍보 및 교육 강화, ③정책정보 전달력 강화, ④예우 및 지원 수준의 개선 측면에서 개선의 검토·추진
 - ①의사상자의 의미와 이해 증진을 위해 직접적이고 쉬운 용어로 개선
 - ②의사상자 사례를 재구성한 홍보, 공공기관 교육 의무화 추진
 - ③도내 공공시설, 주차장 등 의사상자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전달
 - ④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수준의 국가보훈제도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

정책제언

- ▶ 의사상자 관련 용어 순화, 의사상자의 지원 범위 및 수준 향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률 및 조례 개정
 - 경기도는 단기적으로 의사상자에 대한 도민의 인식 증진을 위해 정책 명칭으로 '사회적 유공자' 등의 명칭을 활용
- ▶ 의사상자 당사자 및 가족의 사회보장 기반 강화
 - 당사자 및 가족의 사회보장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서비스 개발·연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시·군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지원
 - 외상 후 스트레스(PTSD) 등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 및 가족은 도내 온마 음센터 등과 연계하여 심리상담 및 회복을 지원
- ▶ 의사상자에 대한 홍보 및 도민 인식조사 시행
 - 의사상자 사례, 정책 등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수단, 읍면동주민센터를 활용한 홍보 추진 및 대상자 발굴 기제로 활용하고, 인식조사를 통해 도민의 관심도 제고



9 772982 554000
ISSN 2982-5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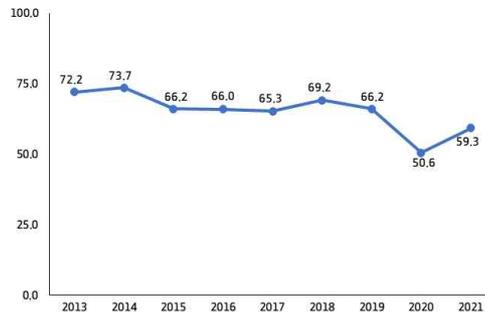
I. 의사상자 개념

일상 속 사회정의와 이타적 행위 실현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등장

압축 성장으로 인한 한국의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는 개인주의와 경쟁주의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한 대인신뢰 수준은 급격하게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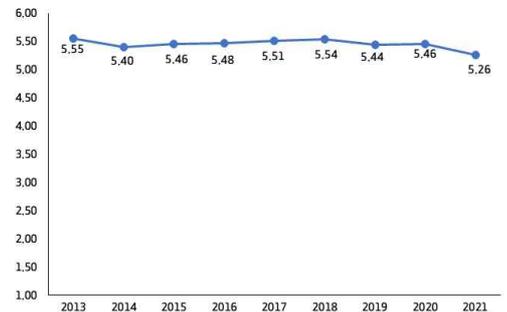
- ▶ 대인신뢰도는 '15~'19년까지 65% 내외에서 '20년 이후 10%p 이상 급격하게 하락함1)
- 대인신뢰도는 자신과 친밀한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로 측정되며, 대인신뢰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유대와 결속의 범위(공동체성)가 약화됨
- 또한, 시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덕목 및 의무와 관련된 시민의식 성숙 수준도 점증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을 보임

<그림 1> 2013-2021년 대인신뢰도



통계청(2023). 2022 국민의 삶의 질 보고서. 보도자료

<그림 2> 2013-2021년 시민의식



- ▶ 한국사회는 최근으로 올수록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약화,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로 고착화되면서 사회적 손해가 증가
 - 개인의 선행 동기가 결과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합리적 외면, 주변에 사람이 많을 경우 방관자 효과로 인한 직접 나서지 않는 상황이 발생
 -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약화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일종의 암묵적 규범이 점증적으로 와해되고 있음

일상 속 사회정의 실현과 타인을 위한 이로운 이들이 사회 곳곳에서 등장

- ▶ 본인의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등장
 - 휴양지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 구출, 화재로 인하여 고층에서 떨어진 사람 구출 등 사회정의와 이익을 실현하려는 다양한 사례들이 등장
 - 해외에서는 타인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책임을 묻지 않는 '착한 사마리안 제도'를 통해 관련 행위를 유인
 - 착한 사마리안 제도는 선한 의도로 타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하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을 면해주는 제도임2)

1) 통계청(2023), 『2022 국민의 삶 보고서』. 통계청.

2) 임완섭 외(2020), 『2020 의사상자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

I. 의사상자 개념

의사상자는 사회적 의
실천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

- ▶ 한국사회는 1970년대부터 사회적 정의 행위에 대한 보호 및 예우를 위한 제도를 운영
 - 1970년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의 제정·시행 이후 1990년 「의사상자 보호법」, 1996년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07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증진
 - 경기도는 2018년부터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의사상자 예우 등 지원을 위한 보충적 정책을 추진

의사상자는 사회적 의(義)의 실천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한 이들을 의미

- ▶ 의사상자(義死傷者)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이를 의미³⁾
 - 의사상자는 의사자와 의상자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
 - 의사자(義死者)는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관련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의미
 - 의상자(義傷者)는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의미
 - 의사상자는 우리 삶 속에서 의(義)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다양한 이들이 존재
 - 시간과 장소,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타인의 생명·재산을 지키고, 사회정의를 몸소 실현한 이들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

[경기도 의사상자 사례]

- 사례 1 : 2022년 8월 이천시 병원 화재 시 환자를 돕다가 사망한 현○○ 간호사
- 사례 2 : 광명시 이웃의 화재 피해를 막고 2도 화상을 입은 양○○씨
- 사례 3 : 2019년 경기도 시흥 외곽순환도로에서 정차된 고장 차량을 발견하고, 돕던 중 사망한 유○○씨
- 사례 4 : 2018년 군포시 군포역 인근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고 부상을 입은 김○○ 씨

[의사상자의 적용 범위]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
- 자동차·열차 등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
- 천재지변, 수난, 화재,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
- 천재지변, 수난, 화재,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하다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
- 해수욕장, 하천·계곡 등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

자료 :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안내(<https://www.gg.go.kr>) 2023년 5월 20일 검색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법률 제15897호, 2018.12.11.) 시행,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조례 제7587호, 2023.03.06. 시행)

I. 의사상자 개념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이층적 정책지원 체계로 운영되며, 경기도는 중앙정부 제도의 보완적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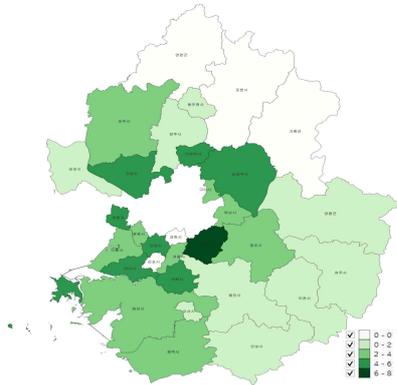
- ▶ 경기도 내 의사상자는 2023년 5월 말 기준 153명이 인정·지원을 받고 있음
 - 경기도 내 의사상자는 연평균, 가평균, 과천시를 제외한 28개 시·군에 분포하고 있으며, 의상자보다는 의사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도내 의사자는 92명으로 26개 지역, 의상자는 61명으로 23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의상자의 평균 연령은 53.3세로 남성의 집중성(96.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경기도 의상자 등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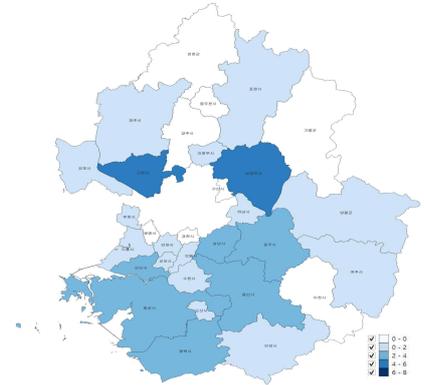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총계
인원	2	-	1	8	5	23	1	10	11	61

자료: 경기도(2023), 「경기도 의사상자 현황」 내부자료

〈그림 3〉 지역별 의사자 현황



〈그림 4〉 지역별 의상자 현황



자료 : 경기도(2023) 내부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직접 지도로 작성함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를 지원하는 이층 정책 지원 체계로 구성

- ▶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법률에 의거하여 중앙정부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인정 및 지원의 역할을 수행, 경기도는 보완적 지원 역할을 수행
 - 의사상자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 후 관련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의사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대상자에 대한 의사상자 청구 외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주의가 원칙임

〈그림 5〉 의사상자 인정 업무 체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I. 의사상자 개념

▶ 중앙정부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보상금, 사회보호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 의사상자 및 가족의 생활 영위 및 명예 보장의 측면에서 지원제도를 운영

- 보상금 의사자 유족, 의상자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최대 228,823천원)하고,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생활 지원 등을 부가적으로 시행

〈표 2〉 의사상자 지원 유형 및 내용

구분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가족
보상금	최대 228,823,000원(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의료급여	의료급여 제공	1~6급 의상자 본인에게 의료급여 제공
교육보호	의사자 자녀 대상	1~6급 의상자 본인 및 그 자녀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대, 초·중학생 부교재비 지등 지원	
장제보호	의사자 유족에게 80만원의 장제비 지급	-
취업보호	직업훈련시설에 훈련 위탁 또는 공공기관 및 적절한 직장의 취업알선	
고궁 등 이용 지원	고궁, 국공립 공원, 박물관, 수목원, 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또는 할인	
국립묘지 안장	유족의 신청에 따라 심사 후 국립묘지 안이장	의상자 1~3급 중 사망한자, 신청에 따라 심사 후 국립묘지 안이장
공직진출 지원	(가점) 만점의 5% : 배우자, 자녀	(가점) 만점의 5% : 의상자 본인 만점의 3% : 배우자, 자녀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 경기도는 중앙정부 차원의 의사상자 지원 외 도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보충적으로 추가 지원제도를 운영

- 경기도는 의사상자 지원을 위해 특별위로금, 월 수당, 명절 위문금 등의 제도를 통해 중앙정부의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있음

〈표 3〉 경기도 의사상자 지원 유형 및 내용

구분	의사자 (유족)	의상자				비고
		1~2급	3~4급	5~6급	7~9급	
특별위로금 (천 원)	30,000	1급 15,000 2급 12,500	3급 10,000 4급 7,500	5급 5,000 6급 4,000	7급 3,000 8급 2,000 9급 1,000	생애 1회
수당 (천 원)	100	80	60	40	미지급	매월(25일)
명절 위문금	명절(설, 추석)에 10만원씩					년 2회

자료 : 경기도 의사상자예우 안내(<https://www.gg.go.kr>) 2023년 5월 20일 검색

II. 지원제도 및 이슈

의사상자의 義 실천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경기도 차원에서는 용어의 개편, 인식 개선, 정책 정보전달, 예우 지원 수준의 적정성 측면에서 제도 개선 검토

의사상자 지원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義의 실천 의미 및 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필요

- ▶ 의사상자 지원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의사상자의 범위 및 법적 요건, 신청절차 등의 간소화, 법률 체계의 개선, 의사상자에 대한 용어의 개선, 의사상자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등의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음
- ▶ 의사상자 지원제도 등 법률적 요건의 개선, 신청 절차 등의 간소화, 법률 체계의 개선 등의 이슈는 경기도 권한을 넘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임
 - 의사상자에 대한 용어 개선을 통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 및 인식격차 완화, 의사상자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의사상자 지원제도 교육 등 경기도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

경기도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①용어의 개선, ②홍보 및 교육 강화, ③정책 정보 전달수준 강화, ④의사상자 지원 수준 측면에서 제도 개선 필요

- ▶ 이슈 ①: 일반 도민 등에게 의사상자의 의미 전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용어 개선
 - 일반 도민들은 의사상자에 대한 명확한 용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의미에 대해 재차 물어보는 등 용어와 의미 이해의 어려움이 있음(경기도의회, 2022)⁴⁾
 - ‘사회적 유공자’, ‘우리동네 시민영웅’ 등 사회적으로 인식·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활용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용어와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우리동네 시민경찰’제도와 같이 직접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단어(용어)를 활용하는 등 제도 개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우리동네 시민경찰]

- ‘우리동네 시민경찰’ 제도는 나와 이웃의 범죄 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심과 실천을 행한 시민을 의미함
- 범인검거, 인명구조, 범죄예방, 사고예방 등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우리동네를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는 일반시민들의 활동에 기반하고 있음

자료 : 대한민국 경찰청 블로그(<https://blog.naver.com/polinlove2/221713460522>)

▶ 이슈 ② : 의사상자의 義활동 홍보 및 교육 강화

- 도내 의사상자의 사례를 재구성한 홍보물 제작·배포하여 활동 홍보 및 발굴 기회로 활용
 - 도내 135명의 의사상자 사례를 토대로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G-Bus 광고,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의사상자 활동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의사상자의 적극 발굴 기회로 활용
 - 의사상자 사례를 묶어 수필집 등의 형태로 발간하고, 발간일에 기념행사도 병행

4) 경기도의회(2022), 경기도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II. 지원제도 및 이슈

- 경기도 및 공공기관 대상 임직원의 의사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제도 도입
 - 경기도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의사상자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도 도입
 - 과거 민선 7기의 경우,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 및 인식 확산을 위해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의무교육의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듯이, 의사상자 관련 교육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하여 도민의 의사상자에 대한 인식 강화
 - 경기도는 도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2조)
 - 의사상자의 사례는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는데,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의 의미 실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슈 ③ : 의사상자 지원 정책의 정보 전달 수준 강화

-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한 의사상자 지원 중 공공시설 등 이용감면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 법률 및 조례 등에서는 의사상자의 고궁 등 공공시설 이용에 대해 최대 1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대상기관에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이용료 감면,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경기도의회, 2022)⁵⁾
- 경기도와 시·군 간 협의를 통해 공영주차장 감면 등의 의사상자 정책에 대한 팸플릿 등 정보 홍보물을 제작·배포
 - 의사상자 지원 정책은 시·군의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협의를 통해 확정

▶ 이슈 ④ : 의사상자 예우 등 지원 수준의 개선

- 중앙정부 차원에서 볼 때, 대상자의 불가측한 희생과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과 공헌, 희생에 알맞은 예우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국가보훈제도와 유사하나, 지원 범위 및 내용 등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제도는 보상금 외 수당, 취업 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양로 및 요양시설 지원,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 주택우선공급, 연수 및 교육 지원 등 대상자 및 가족의 생활 영위 및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보상금, 교육 급여, 취업 지원 등 관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제도와 비교할 때, 지원의 범위 및 수준 측면에서 차이가 큼
- 의사상자가 행한 사회적 義의 수준과 가치를 고려할 때, 관련 법률 개정 등 현재 수준보다 개선·강화 필요
 - 중·장기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제도 등과의 제도 내 정합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 및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사상자 관련 법제의 개정이 필요함

5) 경기도의회(2022), 경기도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II. 지원제도 및 이슈

〈표 4〉 국가유공자법 vs 의사상자 법 지원 내용 비교

구분	국가유공자법	의사상자법
보상금	최대 4,296,000원(월)	최대 228,823,000원(일시금)
수당	생활조정수당, 부양가족수당, 간호 수당 등	없음
교육지원	수업료 등의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급여, 입학금 및 수업료, 부교재비 지원
취업지원	- 직업훈련, 능력개발 장려금 지급 - 채용시험 가점(최대 10점), 국기기관 의무 채용 기업체 등 의무채용 의무, 보훈특별고용 등	- 직업훈련 시설 훈련 및 취업 알선 - 공공기관 채용 가점(최대 5점)
의료지원	의료지원, 진료비 지원, 보철구 및 의학재활 지원 심리 재활 지원, 의료시설 이용 비용 지원	의료 급여
대부지원	농토구입, 주택대부, 사업대부 등 자금 지원	없음
기타	양로지원, 요양지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고궁 등 이용지원, 생업지원 주택 우선공급, 국가유공자 등 연수 교육 지원, 장제지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장제보호,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5월 30일 검색하여 연구진이 정리
국가보훈처(2023), 「2023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보훈제도」

- 경기도가 의사상자를 지원하는 수준은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특별위로금, 월 수당 지급 등 긍정적이며, 이 외에 공공 시설 이용료 감면, 기념행사 초청, 포상 등 예우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음

〈표 5〉 광역자치단체 의사상자 지원 내용 비교

구분	특별위로금	1~2급	3~4급	5~6급	7~9급	수당	
경기도	의사자	3,000만원	-	-	-	-	10만원
	의상자	-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8만원 이하
서울시	의사자	3,000만원	-	-	-	-	-
	의상자	-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
인천시	의사자	3,000만원	-	-	-	-	5만원
	의상자	-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3만원 이하
전북	의사자	3,000만원	-	-	-	-	10만원
	의상자	-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8만원 이하
경북	의사자	5,000만원	-	-	-	-	5만원
	의상자	-	3,000만원	1,500만원	750만원	300만원	3만원 이하
경남	의사자	3,000만원	-	-	-	-	10만원
	의상자	-	2,000만원				8만원 이하
제주	의사자	3,000만원	-	-	-	-	-
	의상자	-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이 정리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제도의 범위 및 수준은 유사 제도(국가보훈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중앙정부의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수준의 확대가 진행되어야 하며, 경기도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지원제도의 수준을 점증적으로 확대

의사상자 관련 법규
정비 및 사회보장
지원 기반 강화,
의사상자에 대한 홍보
등 지원 필요

‘의사상자’ 의미 전달 및 도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관련 법규 정비

- ▶ ‘의사상자’ 관련 용어 순화, 의사상자 지원 범위 및 수준 향상 등을 위한 제도 정비
 - 의사상자의 의미 전달을 명확화하고,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사회적 유공자’ 등 의미 전달이 명확한 용어로의 개선과 지원 범위 등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교육, 취업, 의료, 기타 보장 등 국가보훈제도의 지원 범위와 수준을 유사한 수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법률 개정 추진
 - 경기도는 법률 개정 이후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정책명(사회적 유공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 경기도는 단기적으로 의사상자에 대한 인식 확대 및 도민의 이해도 증진을 위해 정책명으로 ‘사회적 유공자’ 용어 사용의 가능성을 검토·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경기도는 조례 개정 후 지원 범위 및 수준의 점증적 확대를 검토

의사상자 당사자 및 가족의 사회보장 지원 기반 강화

- ▶ 의사상자 당사자 및 가족의 사회보장 욕구를 지원 실태조사, 모니터링 기반 마련
 - 당사자 및 가족의 고령화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욕구 유형 및 필요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욕구 조사를 시행하고, 시·군에서 관련 지원을 연계하는 기반 마련
 - 의사상자 지원제도 외 사회보장 욕구와 관련하여 당사자 및 가족 대상 욕구조사 등을 통해 필요 서비스를 발굴·지원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의 생활 안정성 및 유지의 기반 제공
- ▶ 외상 후 스트레스(PTSD)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해 안산 온마음센터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심리회복 및 상담 등을 지원
 - 단기적으로는 도내 치료 및 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및 비용 지원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내용의 제도화를 추진
 - PTSD 전문 클리닉을 설치하여 상담, 검사, 치료 프로그램의 체계적 지원과 PTSD 진단 및 지원 등이 현행 의사상자 등급 체계(1등급~9등급)편입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선

의사상자에 대한 홍보 및 도민 인식조사 수행

- ▶ 의사상자 제도 및 관련 사례에 대한 홍보를 통해 도민의 점점 확대
 - 도민들의 의사상자 제도 및 정책 중심의 대중교통 수단(G-Bus, 경기도 택시 등)을 활용한 홍보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의사상자 안내 브로셔 제공을 통해 홍보 및 의사상자 발굴의 기회로 활용
 - 도민 대상 의사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인식조사 시행을 통해 정책 등 관련 의견 수렴,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전략으로 활용하여 도민의 관심도 제고